

# 한·미 FTA 타결후 양돈산업이 준비할 것과 얻어내야 할 것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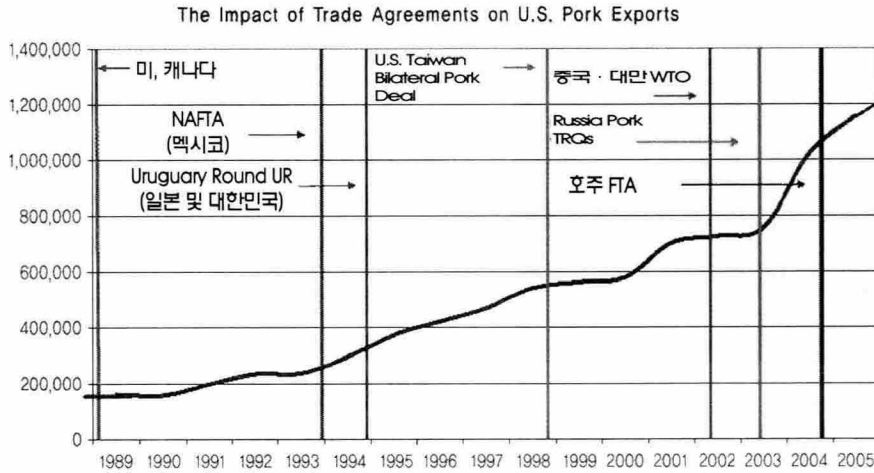
정 찬 길 명예교수  
진국대학교 축산대학

## 1. 양돈산업에 최악의 영향을 미칠 한·미 FTA 타결

‘10년에 걸쳐 돼지고기 관세의 완전철폐와 세이프가드 설정, 원산지는 도축지를 기준’하기로 한 한·미FTA타결은 우리 양돈산업에 최악의 협상으로 특히 비육돈, 도축용 성돈, 교체돈 등 약 9백만 두(2006)를 캐나다와 멕시코 등으로부터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는 미국에 생산지를 기준하는 원산지마저도 지키지 못하였으니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으며 잃을 것만이 산적하게 되었다.

지난 4월 2일 발표된 미국과의 FTA 타결내용을 살펴보면, 냉장 삼겹살과 기타(갈비 목살 등) 등은 10년 폐지, 10년차까지 SG를 발동하고 SG 발동물량은 8,250톤 → 13,938톤(매년복리 6% 증량)으로 확증하고, SG 발동세율은 (1~5년차까지)실행세율100%에서 → (6~10년차까지)70% → 50%(매년 5%씩 삭감)로 감축하는 것이다. 냉장육(도체와 이분도체, 전 후지), 냉동육, 식용설육, 돼지고기 가공품 2014년 1월 1일에 폐지(7년 폐지와 유사)고, 소시지는 5년에 걸쳐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미국의 돼지고기산업은 2005년 기준 중국, EU-25 다음으로 세계 3위의 생산국이며 EU-25 다음의 제 2위 수출국으로 높은 생산성, 생산비와 가격의 우위, 첨단 가공과 저장기술에 의한 최우수 품질과 안전성은 물론 최고의 사양기술을 앞세운 대규모 기업경영체로 저가 고품질의 돼지고기생산으로 국제교역을 빠르게 장악해 가고 있기 때문에 양돈분야의 FTA타결 조건으로 미국의 수입돼지고



(그림) 수입자유화가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미친 영향

기에 대응과 경쟁은 걸어서 태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는 커다란 난제로 우리 양돈산업의 앞을 가로 막는 큰 빙산이 되었다.

## 2. 미국의 양돈산업은 최첨단 기술의 거대 생산 수출국

NAFTA 체결이후 미국의 양돈산업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미친 영향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1994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간 체결된 NAFTA가 2003년 종료될 때까지 어떠한 충격을 캐나다와 멕시코에 주었으며 2006년까지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하여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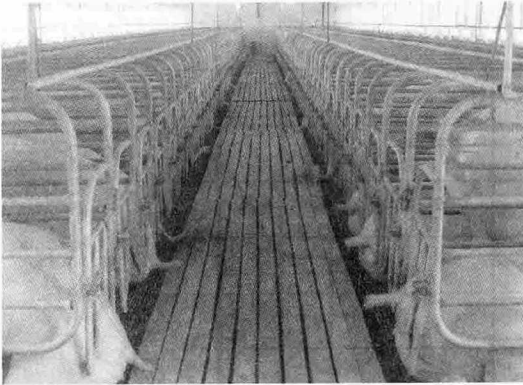
1994년 NAFTA 발효 후 미국의 대캐나다 돼지고기 수출은 1993년 37백만 달러에서 2004년 301백만 달러로 8.1배나 증가하였으며, 대멕시코 수출은 100만 달러에서 556.5백만 달러로 5.6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미국은 UR로부터 GATT, WTO,

NAFTA, FTA에 이르는 국제무역자유화 과정에서 돼지고기의 대량 수출국으로 변모하면서 최대의 수혜를 만끽하고 있다.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무역자유협정타결이 실현되면서 미국의 돼지고기 수출에 기하급수적 상승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예컨대 미국은 돼지를 비육 도축하여 수출로 출하 1두당 15달러(2003년 기준)의 부가가치를 추가 창출하고 있는 것이 이를 극명하게 입증하고 있다.

## 3.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양돈산업의 예상 변화

한국과 칠레는 FTA 체결이후 돼지고기의 활발한 교역이 진행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입 현황은 FTA 체결전 통관기준 2002년 3,386톤(6,328천달러)에서 체결후 2006년에는 30,773톤(82,041천달러)로 9배나 폭증하였는데 관세감축이 가장 큰 유인요인이다.



미국과 FTA를 체결하면 농산물 전체에 약 1조5천267억 원의 생산자 수입 감소가 초래될 것으로 분석되었고, 경제적인 피해는 2~6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다양한 추정결과가 나오고 있다. 돼지고기는 약 2만2천719톤의 생산량 감소와 2천455억원의 생산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발표되었다.

FTA가 체결되어 냉동돈육 관세 25%가 0%로 될 때 미국산 돼지고기 선호부위(삼겹살, 목살, 전지, 갈비)를 수입할 경우 국내산 지육가격은 2004년 기준 3,517원/kg에서 2,978원/kg으로 13.5% 하락하고, 생돈가격은 2,340원/kg에서 2,019원/kg으로 13.7%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사육 규모별 구조조정이 불가피하여 사육규모가 적어 생존력이 취약한 1,000두이하 80%의 양돈농가들을 중심으로 야기될 급격한 구조 조정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의 수반이 불가피할 것이며, 5,000두 규모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것이고 10,000두 이상의 기업형 양돈장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어 이에 대응할 구조조정과 정책적 변화가 화급한 과제이다.

#### 4. 한·미 FTA 체결에 대응하여 준비할 것들

가. FTA 타결 이후 우리 양돈산업의 생산과 소비측면의 구조조정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국형 양돈산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폐사율 감소를 위한 시설 개보수 자금을 전업농 중심으로 확보, 도축세는 마땅히 폐지, 가축분뇨처리 시설비를 보조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 이를 위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무역을 왜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내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나. 가축질병 발생과 같은 긴급사태에 빠르고 효율적으로 개입하는 질병관리 국내지원 체제 강화하고 쌀농사에 상응하는 직불제와 같은 보상방안을 강구하고, 기타 양돈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다.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를 갖는 SPS 분야 제어장치를 도입해야 하며, WTO/SPS 규정이나 협정 내에서 환경 이슈나 돼지사양관리와 같은 비관세 무역보호 장치를 강구하고 위생·검역에 있어서 WTO 등의 기준 내에서 돼지고기의 무방비 수입을 제어할 수 있는 세칙을 마련하고 생산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도입해야 한다.

라. 돼지고기 수출국의 돼지질병을 철저히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PRRS, CSF, TGE 등 질병발생시 수입금지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마. 수출국의 국내외 돼지/돼지고기 수출단가와 국내 판매가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여 국내 구매자와 수출가격차별시(Price Differentiation) 반덤핑관세(Anti-Dumping Tariff)를 부과하는 프로그램 활용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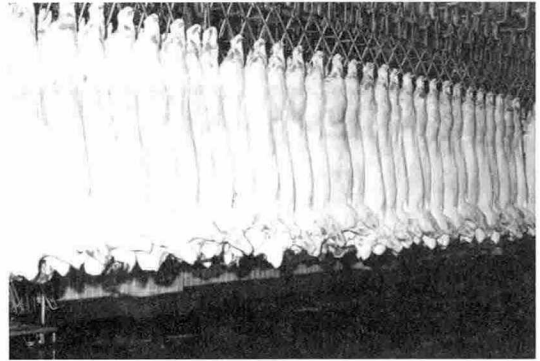
바. 수출국의 돼지/돼지고기에 대한 생산, 가공, 수송, 사료원료용 곡물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 합리성, 적법성 등을 검증하여 덤핑관세 조치 가동해야 한다.

사. FTA 이후 양돈산업의 새로운 모형정립을 위한 산업의 다음과 같은 재편이 절대적 과제이다.

- FTA 타결을 포함한 완전무역자유화에 대응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생산구조개편 ① 규모가 작은 농가, ② 생산비가 높은 농가, ③ 단독경영자의 비전업 농가, ④ 낙후한 기술을 이용하는 농가, ⑤ 고령의 경영인 농가, ⑥ 후계자가 없는 농가, ⑦ 인구밀집 도시근교 농가들은 혁신적으로 구조를 개편하는 중 장기적 대책을 강력히 추진

- 적자생존(適者生存) 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규모 확대를 위하여 ① 경쟁력이 있는 규모를 중심으로 양돈산업을 재편해야 하며, ② 시설자동화를 갖춘 가족노동중심의 단지화, 집단화, 전문화로 규모 확대해야 한다.

- 소비자들에게 차별화된 돼지고기 및 제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① 고품질의 안전한 우량 브랜드 집중 육성하고, ② 환경과 조화되는 친환경 양돈업 시스템 구축하며, ③ 단일 경영 혹은 집단경영체 이견 규모의 경제성을 달성하는



저비용 경영체로 전환과 ④ 사전예방 위주의 선진 방역체계 구축해야 한다.

- ① 생산과 도축·가공을 계열로 연계하는 지역적 집중화는 물론 ② 고품질화, 전국적 브랜드화를 통한 선진유통체계를 구축하고, ③ 원산지표시(COOL) 도입확대로 국내산, 수입산 구분판매 정착, ④ 또한, 혁신적 신기술의 채택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협동 혹은 기업적 계열화를 통한 계약생산체제의 강화해야 한다.

- 생산·가공·유통·분뇨처리시설의 연대이용 체계 구축, 생산자 조직을 주축으로 사육·사료·생산·가공·판매를 연계하는 계열화 혹은 집단화 체제를 전개하며 시설자동화 등 고정자본재 확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인력양성과 노동의 전문화를 위한 기반 강화해야 한다.

- 도시근교 및 인구밀집 지역의 양돈업 재입지를 통하여 환경, 질병,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한 격리 및 분산경영체제를 확산시키고, 격리 및 분산을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간척지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여 FTA 타결 이후 양돈산업의 혁신적 재개편을 위한 정책적 지원해야 한다. **양돈**